

현안^과 과제

■ 한국경제, 일본 닮고 있다!

- 한일 간 비교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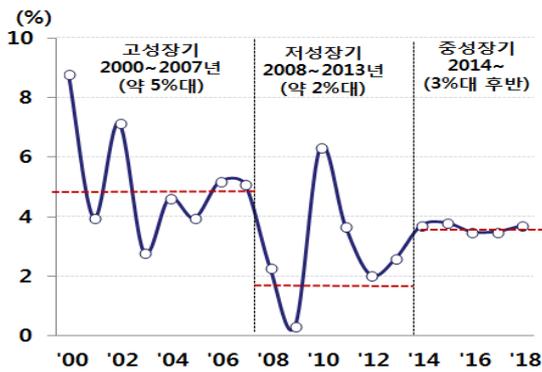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를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경제, 중성장 시대 진입 우려 고조

- (국내 경제 중성장 시대 진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를 거쳐 향후 국내 경제는 중성장 시대로 진입할 전망으로, 선진국 진입 지연 우려
 - 중성장 시대 장기 지속 우려
 - 소비 및 투자 여력 미흡, 복지 확대에 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고성장 시기로의 회귀가 불투명한 상황

< 국내 경제의 장기 성장추이와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IMF.

< 중성장기 국내 경제의 특징 >

성장 중심축 이동	노동과 투자 등 생산요소 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 급락
소비여력 회복 부진	자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고령화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약화
투자여력 미흡	설비 및 건설 투자 부문에서 기업들의 투자여력 미흡
복지 확대에 성장여력 축소	고령화 사회 진입, 복지예산 확대에 성장 여력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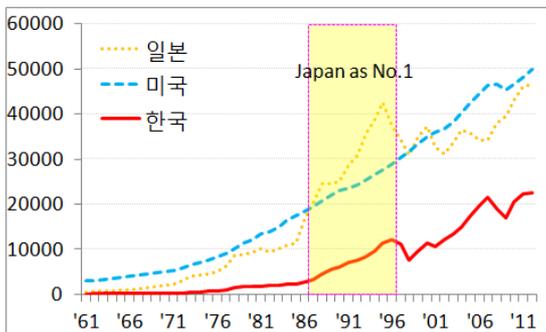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선진국 진입 지연 우려

- 일본은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인 미국의 1인당 GDP 수준을 1987년부터 추월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국가로 성장
-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 일본의 버블붕괴와 같은 큰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일본과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도 큰 상황

< 한미일 1인당 GDP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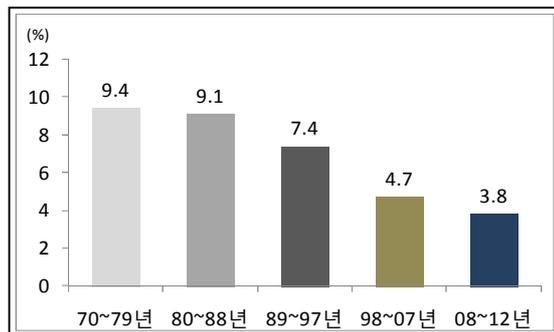
(명목 달러)



자료 : World Bank.

<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2.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경제

1) 경제규모와 과학기술경쟁력은 일본 추격 중

○ (경제 규모) 세계 GDP 순위 및 1인당 GDP는 한국이 일본을 추격 중

- 한국의 GDP 규모는 일본의 약 1/3 수준

- 한국의 2012년(추정) GDP 규모는 약 1.6조 달러로 일본의 약 4.6조 달러의 1/3 수준
- 세계 GDP 규모 순위는 한국이 12위, 일본은 4위

-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은 일본의 약 50% 수준

- 한국의 명목 1인당 GDP 규모는 1995년 1만 1,779달러에서 2012년에는 2만 3,021달러에 달할 전망
- 일본의 명목 1인당 GDP 규모는 1981년 1만 218달러, 1987년 2만 367달러, 1992년 3만 973달러, 1995년 4만 2,516달러를 달성, 2012년에는 4만 6,896달러에 이를 전망
- 한편,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을 일본에 비교하면, 201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980년대 후반 수준에 불과
- 하지만, 198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약 20%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2012년 약 50% 수준에 이르러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

< 세계 GDP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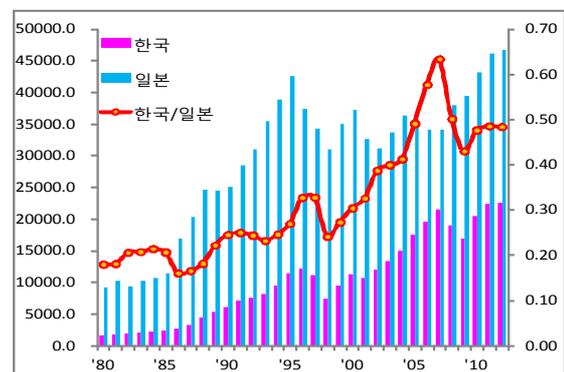
순위	국가	GDP(구매력 평가)
1	미국	15.7조 달러
2	중국	12.4조 달러
3	인도	4.7조 달러
4	일본	4.6조 달러
12	한국	1.6조 달러

자료 : CIA.

주 : 2012년 기준 추정치.

< 한일 1인당 GDP 추이 >

(1인당 GDP, 달러) (한국/일본)



자료 : WB,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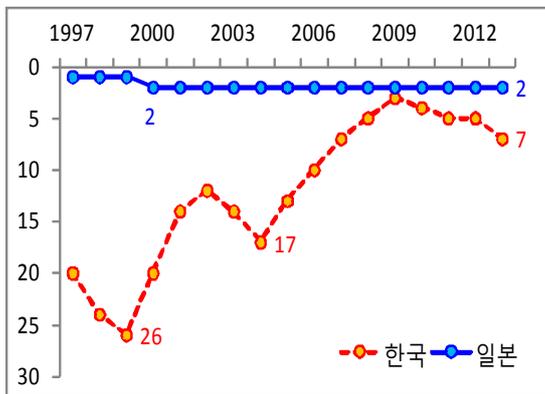
주 : 2012년은 추정치임.

○ (과학기술 경쟁력)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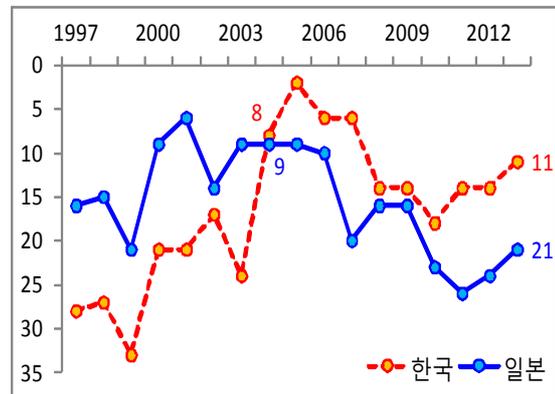
- IMD 평가에 따르면 과학경쟁력은 일본, 기술경쟁력은 한국 우세

- IMD에 따르면 한국은 對日 과학경쟁력 격차를 대폭 축소시켜 왔을 뿐 아니라 기술경쟁력은 일본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
- 한국의 과학경쟁력 순위는 1999년 26위에서 2013년 7위로 19계단 상승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24계단에서 5계단으로 축소됨
- 기술경쟁력은 2004년 한국이 8위, 일본이 9위로 한국이 역전시킨 이후 최근 2013년에는 한국 11위, 일본 21위로 나타남

< 한일 과학경쟁력 순위 추이 >



< 한일 기술경쟁력 추이 >



자료 : IMD.

- 과학기술 경쟁력을 부문별로 평가해 보면 한국은 절대지표 열위가 지속되고 있고, 상대지표로도 과정과 성과 지수는 아직 열위에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 경쟁력 부문별 평가를 위해 투입, 과정, 성과로 지표를 구분하고 절대지표와 상대지표로 나눠 평가
-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부문별 평가 결과 2011년 현재 한국의 절대지표 종합지수는 44.4로 일본 124.6의 1/3 수준에 불과하나, 2001년 수준에 비해서는 격차 축소
- 상대지표에서는 투입지수가 일본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정지수와 성과지수도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추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일 과학기술 경쟁력 부문별 평가를 위한 지표 구분 >

구분		지표
절대지표	투입지표(2개)	- R&D 투자, 총연구원수
	과정지표(3개)	- 논문수, 삼극특허건수, PCT 특허건수
	성과지표(2개)	- 기술무역 수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액
상대지표	투입지표(2개)	- GDP 대비 R&D 비중,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과정지표(3개)	- 연구원 1인당 논문건수, 연구원 1인당 삼극특허건수, 연구원 1인당 PCT 특허건수
	성과지표(2개)	- 기술무역 수지비/R&D 투자, 하이테크산업 수출액/R&D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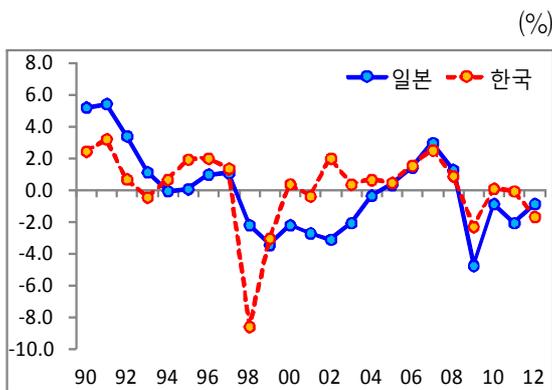
< 한일 과학기술 경쟁력 부문별 평가 결과(일본 2005년=100) >

구분		절대지표				상대지표			
		투입 지수	과정 지수	성과 지수	종합 지수	투입 지수	과정 지수	성과 지수	종합 지수
한국	2001년	18.3	11.4	20.3	16.7	67.0	56.9	123.0	82.3
	2005년	25.1	22.0	39.2	28.8	79.2	83.1	164.8	109.0
	2010년	39.9	32.1	53.3	41.8	108.6	82.6	129.9	107.0
	2011년	44.5	34.5	54.2	44.4	117.2	81.3	116.4	105.0
일본	2001년	88.3	78.6	79.2	82.0	93.7	81.9	98.3	91.3
	2005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0년	102.4	109.1	130.6	114.1	97.5	113.2	120.4	110.4
	2011년	105.2	117.4	151.3	124.6	99.9	121.6	132.9	118.1

2)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경제

- (성장 잠재력 약화) 최근 한일 양국의 성장세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성장 잠재력이 약화
 - 한일 양국 GDP 갭률 마이너스 지속
 - GDP 갭이란 잠재 GDP에서 실질 GDP를 뺀 값을 말하며, 플러스일 경우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 마이너스일 경우 잠재성장률을 하회
 - 한일 양국 모두 GDP 갭률이 2009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
 - 한일 양국 모두 경제 성장세가 약화
 -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0년대 1.5%에서 2000년대 들어 0.9%로 하락
 -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0년대 6.7%에서 2000년대 들어 4.3%로 하락
 - 잠재성장률도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국은 급락하고 있음
 -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0.3%, 2000년대 들어 1.9%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1990년대 약 7%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4%대, 최근에는 3%대 후반으로 빠르게 하락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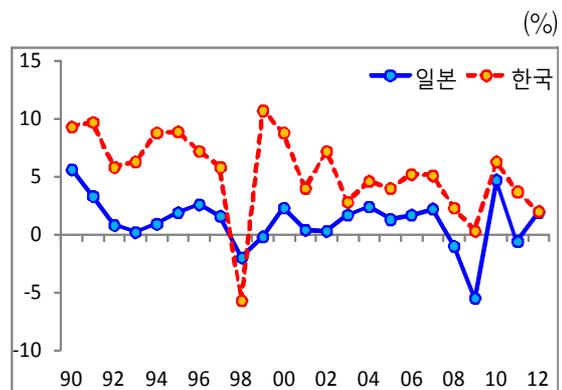
< 한일 GDP 갭률 추이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94, November 2012, OECD Annual Projections.

주 : GDP 갭률은 잠재 GDP에서 실질 GDP를 뺀 값으로 %로 표시.

< 한일 실질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94, November 2013, OECD Annual Projections.

1) OECD, Economic Outlook No 94, November 2013, OECD Annual Projections을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 (산업공동화 우려 심화) 한일 양국 모두 국내 투자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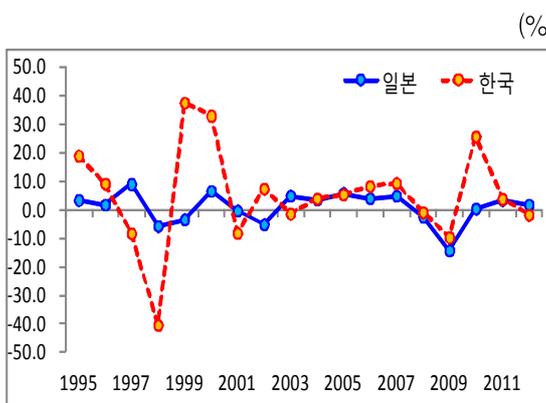
- 한일 양국 모두 자국 내 투자 침체

-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 0.9%로 0%대에 머물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침체 국면이 지속
-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5~2012년 평균 5.0%에 불과

- 양국 해외직접투자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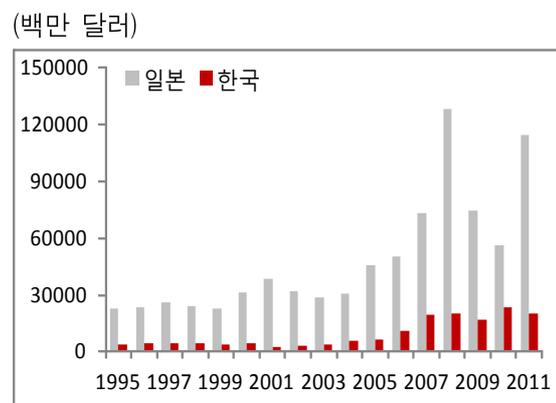
- 한일 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일본이 10.7%, 한국이 11.5% 증가

< 한일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日本 内閣府.

< 한일 해외직접투자 추이 >



자료 : OECD.

○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저출산 현상이 일본보다 심각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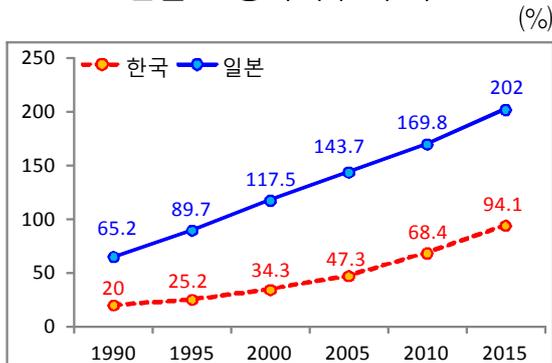
- 한일 양국 모두 고령화 진행 가속

- 일본의 경우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1990년 65.2에서 2010년 169.8, 2015년에는 202.0까지 상승할 전망
- 한국도 노령화지수가 1990년 20.0 수준에서 2015년에는 94.1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저출산 현상은 한국이 일본보다 심각한 수준

- 합계출산율은 출산가능연령(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여성 1인 당 1.3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2015년에는 1.42명 수준까지 회복
- 한국의 경우 2005년에 여성 1인 당 1.22명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후 2015년에는 1.39명으로 다소 회복되나,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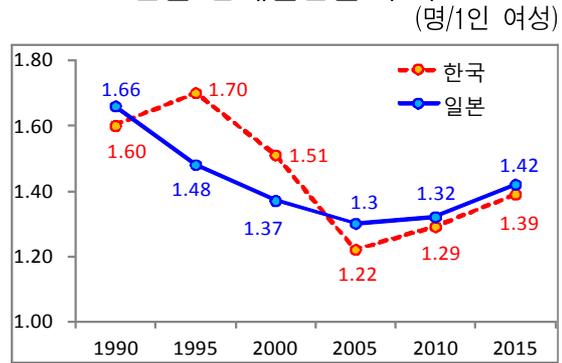
< 한일 노령화지수 추이 >



자료 : UN, 통계청.

주 : 노령화지수는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말함.

< 한일 합계출산율 추이 >



자료 : UN, 통계청.

주 :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 연령인 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

○ (양극화 심화) 한일 양국 모두 양극화 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는 일본이 높은 수준이나, 한국도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상승
 - 일본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 0.321에서 2000년대 후반에 0.329로 다시 상승
 - 한국의 경우도 2000년대 중반 0.306에서 2000년대 후반 0.314로 상승

< 한일 지니계수 추이 >

구분	한국	일본
1990년대 중반	-	0.304
2000년대 초반	-	0.337
2000년대 중반	0.306	0.329
2000년대 후반	0.314	0.336
2011년	0.311	-

자료 : OECD.

주 : 세후 소득 기준임.

○ (장기 내수 침체) 한일 양국 모두 투자와 민간소비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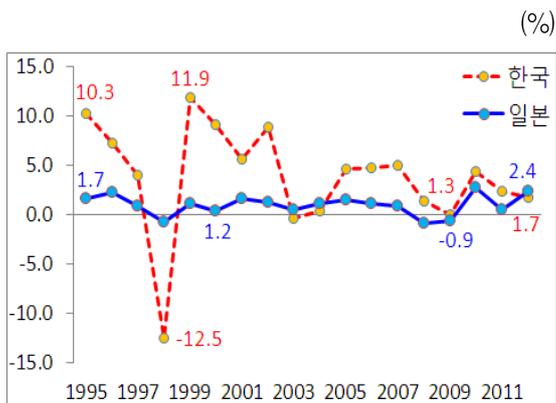
- 1995년 이후 일본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1%대,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2% 수준으로 급락

- 1995년부터 일본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1.0%로 1%대에 머물고 있음
- 반면, 한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1995년-2012년까지 평균 3.8%로 일본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2%(2008~2012년)로 급락

- 한일 양국 모두 투자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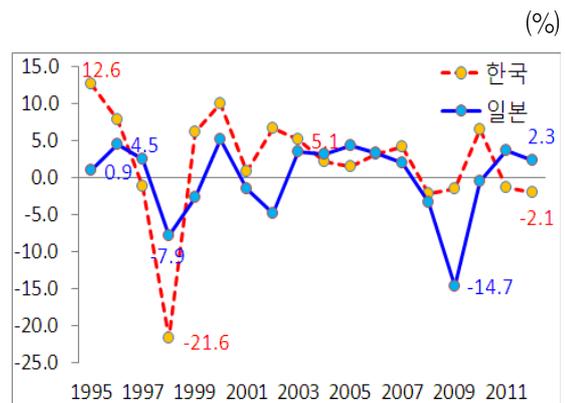
- 일본의 투자 증가율은 2001~2012년 평균 -0.2%로 감소세가 지속
- 한국은 동기간 평균 1.9%로 일본을 상회, 하지만 최근 5년간 투자 평균 증가율이 -0.1%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침체 국면이 지속

< 한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 한일 투자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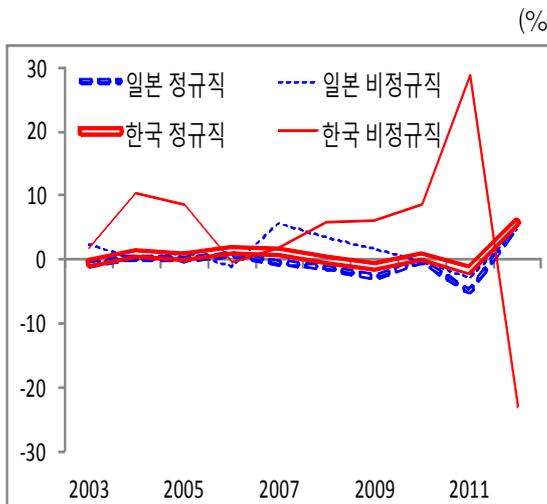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 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합임.

○ (고용 환경 악화) 한일 양국 모두 고용 확대 한계 상황에 직면, 정규직 고용보다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등 고용 환경이 악화

- 2012년을 제외하면 일본은 최근 총고용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0~2011년 연속 비정규직 고용자도 감소)
 - 일본의 고용자 수는 2012년 6,104만 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6,263만 명에 비해 159만 명 감소한 수준
 - 한편, 일본의 총고용자 수가 증가했던 2004~2007년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2007년부터 감소로 전환된 반면, 비정규직은 2004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 17.7%에 달했던 비정규직 비중이 2011년에는 20.6%까지 상승
 - 특히, 2010년부터는 비정규직 고용자마저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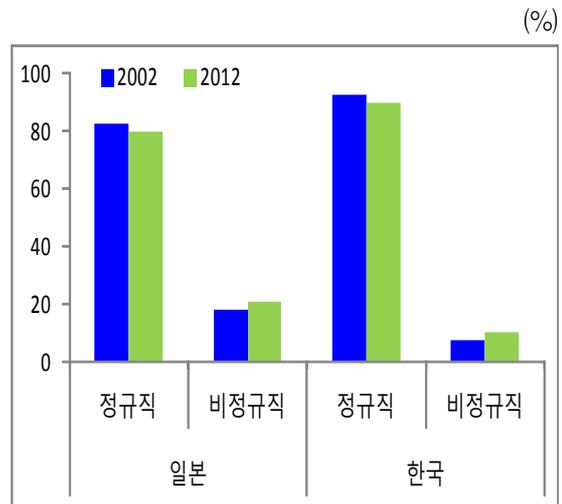
- 2012년을 제외하면 한국도 정규직 고용자 수가 미미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고용수도 증가 양상)
 - 2003~2011년 사이에 전체 고용자 수는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증가세를 보여, 총 고용자 수는 2003년 대비 2011년에 8.6% 증가
 - 총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것은 정규직 고용자 수가 2008년 2,107.3만 명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1년에 2,060.8만 명으로 감소한데 반해, 비정규직은 2002년 166만 명에서 2011년에 321.6만 명으로 약 2배 증가한데 따른 현상
 - 이로 인해 비정규직 비중은 2002년 7.6%에서 2011년 13.5%까지 상승

< 한일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자 증감률 >



자료 : OECD.

< 한일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 >



자료 : OECD.

- 2) 일본의 고용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11년까지 4년간 감소를 기록한 바 있음. OECD.
- 3) 한국의 고용자수는 2009년에 2008년 약 2,324만 명에서 0.4% 감소한 약 2,314만 명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후 1%대의 낮은 수준으로 고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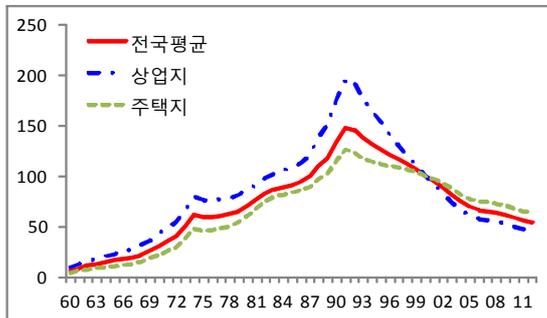
○ (부동산시장 및 건설 투자 부진) 일본은 버블붕괴 후 지가 및 건설투자가 1970년대 수준으로 하락, 한국도 부동산시장 침체와 건설투자 부진 지속

-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 및 건설 시장 부진 지속

- 일본의 상업지가격지수는 1991년 199.5, 주택지가격지수는 126.1까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12년에는 평균 시가지가격지수가 54.2까지 하락하여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
- 일본의 건설투자도 1992년 약 84조 엔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2년에는 약 45.3조 엔으로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축소

< 일본 시가지가격지수 추이 >

(2000년 3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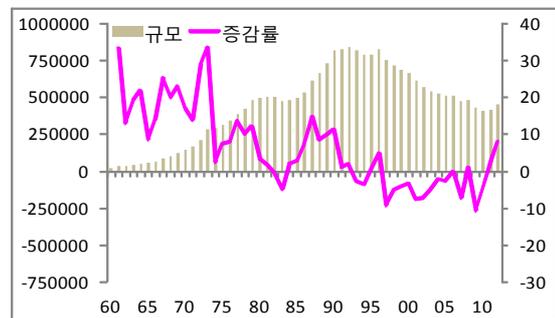


자료 : 日本不動産研究所, 市街地価格指数・全国木造建築費指数 및 日本 總務廳 統計局.

< 일본의 건설투자 추이 >

(억 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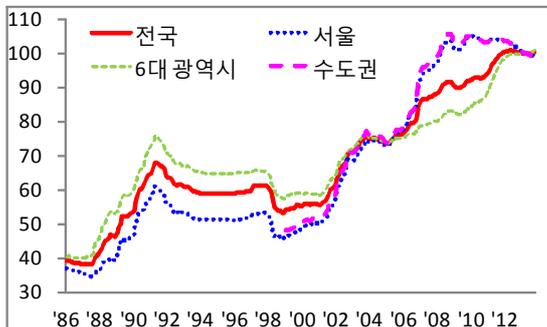
자료 : 日本 國土交通省, 平成24年度建設投資見通し, 2012년 6월 22日.

- 한국도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투자 부진 지속

- 한국의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012년 5월 103.1까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 이후 하락세 지속. 특히, 수도권은 2011년 중반 이후 가격 하락세
- 한국의 건설투자는 2009년 약 159.2조 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2년에는 약 143.0조 원으로 2002년대 수준으로 축소

< 한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

(2011년 6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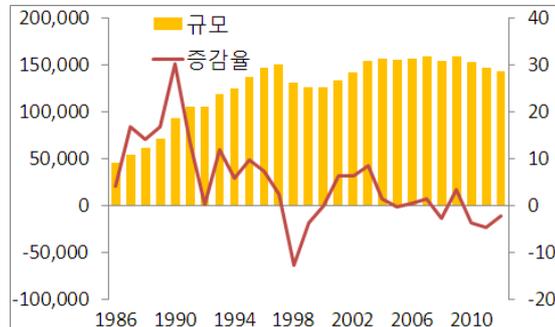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

< 한국의 건설투자 추이 >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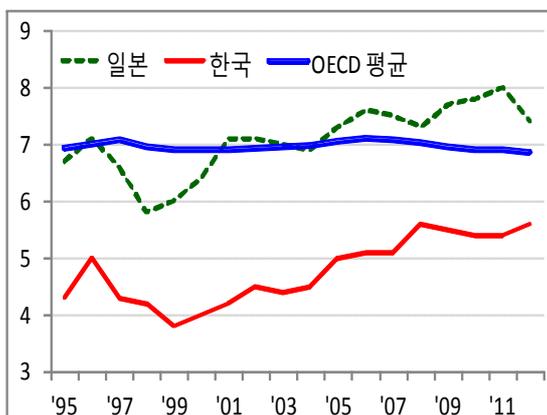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3) 사회적 자본도 일본에 열세인 한국

- 한국은 각종 사회적 자본 수준들이 일본에 비해 아직도 약함
 - 영국의 Legatum Institute의 Prosperity Index(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교육, 기업가 정신 및 기회의 2개 부문 이외에는 일본에 비해 큰 격차로 뒤지고 있음
 - 영국의 Legatum Institute는 2010년부터 8개 부문에 걸쳐 Prosperity Index(번영지수)를 발표
 -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은 일본에 무려 31위나 순위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특히 취약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과는 큰 격차
 - 2012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5.6으로 일본 7.4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같은 해 한국은 OECD 평균 6.9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05년에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 이후 2012년까지도 유지

< 한일 양국 간 CPI 지수 추이 >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주 : 2012년 지수 값은 100점 만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 2012년 부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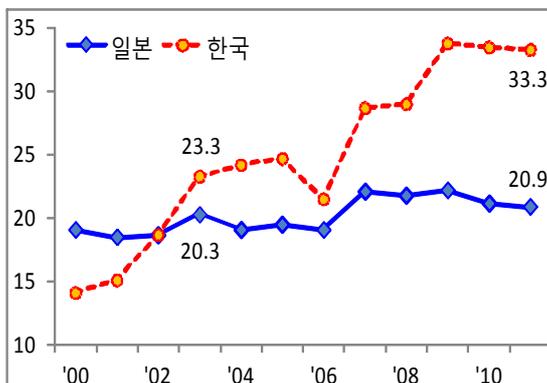
번영지수(Prosperity Index) >

구분	한국	일본	한국-일본
사회적 자본	51	20	31
개인의 자유	56	42	14
안전보장	40	16	24
건강	24	6	18
교육	7	23	-16
거버넌스	30	22	8
기업가정신 및 기회	19	23	-4
경제	23	12	11

자료 : Legatum Institute.
 주 : 149개국 중 순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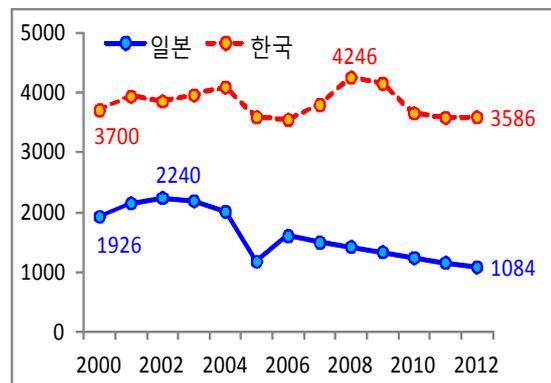
- 2000년대 초반 이후 자살률이 일본을 상회하고,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등 사회적인 불안 정도도 일본에 비해 높음
- 한국의 자살률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2003년부터는 일본을 상회하는 수준
 -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 당 14.1명에서 2011년 동 33.3명으로 약 2.4배 수준으로 증가
 - 2003년부터 8년 연속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 일본은 2003년에 20.3명으로 20명대에 진입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2명으로 최고 수준에 달한 이래 최근 다시 20.9명으로 하락
 - 한국은 2003년 23.3명으로 일본 20.3명을 추월하기 시작, 2011년에는 약 12.4명 정도 높은 수준으로까지 확대
- 한국의 범죄율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범죄율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4,246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3,586건으로 감소
 - 다만 이는 2011년 일본 1,084건의 3배 이상 수준

< 한일 자살률 추이 >



자료 : OECD.
주 : 10만 명 당 자살 규모.

< 한일 범죄율 추이 >



자료 : 한국 경찰청, 2011 경찰통계연보; 日本警察廳警察白書 各年호.
주 : 인구 10만 명 당 범죄 건수.

○ 노벨상 수상자 수도 한국이 절대적 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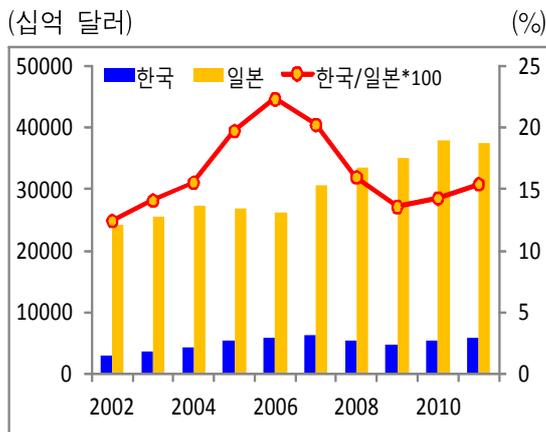
-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1건이 전부이나 일본은 유카와 히데키(湯川 秀樹)의 1949년 물리학상을 비롯해 총 1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 일본의 경우 물리학상 6명, 화학상 7명, 의학상 2명,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으로 총 18명의 노벨상 수상자 보유

< 일본의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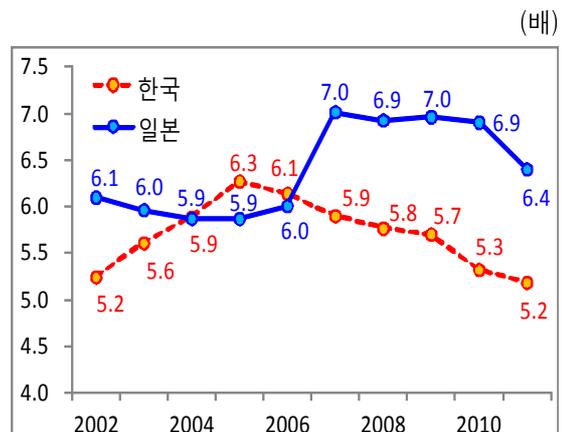
분야	연도	이름
물리학상	1949년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1965년	토모나가 신이치(朝永振一郎)
	1973년	에사키 레오나(江崎玲於奈)
	2002년	코시바 마사토시(小柴昌俊)
	2008년	코바야시 마코토(小林誠)
	2008년	마스카와 토시히데(益川敏英)
화학상	1981년	후쿠이 켄이치(福井謙一)
	2000년	시라카와 히데키(白川英樹)
	2001년	노요리 요우지(野依良治)
	2002년	타나카 코우이치(田中耕一)
	2008년	시모무라 오사무(下村脩)
	2010년	스즈키 아키라(鈴木章)
	2010년	네기시 에이이치(根岸英一)
의학상	1987년	토네가와 스스무(利根川進)
	2012년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문학상	1968년	카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1994년	오오에 켄자부로(大江健三郎)
평화상	1974년	사토우 에이사쿠(佐藤榮作)

- 국부(국가자산)도 한국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GDP 대비 국부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
 - 한국의 국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
 - 한국의 국부 규모는 2011년 현재 총 5조 7,824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7년 6조 1,858억 달러에서 축소되었으나, 2009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 일본의 국부는 2007년부터 증가세 지속
 - 일본의 국부 규모는 2005년과 2006년 연속 감소하다 2007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1년에는 총 37조 5,358억 달러 수준에 달함
 - 한국의 국부 규모는 일본의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한국의 국부 규모는 2011년 일본의 15.4%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 비중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GDP 대비 국부 규모가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근 하락세 지속
 - 한국의 GDP 대비 국부 규모는 2011년 5.2배 수준으로 일본의 6.4배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 더욱이 한국의 GDP 대비 국부 규모는 2005년 6.3배를 기록한 이후 6년 연속 하락세에 있음

< 한일 국부 추이 >



< GDP 대비 국부 비중 추이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日本 内閣府로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1. 국부는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합계.

2. 한국은 국가자산통계에서 비금융자산,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서 금융자산을 이용했으며, 일본은 국가자산통계를 이용.

3. 시사점

- 첫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로 성장 엔진을 재점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함
 - 한국경제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몰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견실하고 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수준 향상은 물론 성장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
 -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어오고 있는 주요 산업들의 대부분이 1960~1970년대 육성되어 왔던 산업들로 최근 성장세는 물론 신규 고용 창출력도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
 - 따라서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도 미시적인 접근과 동시에 거시적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요소 투입 면에서는 노동의 양적·질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전반의 투자 확충을 위한 친투자환경 조성이 시급할 뿐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노동의 양적 투입 측면에서는 여성과 청년, 고령층의 사회적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노동 투입과 수요 미스매칭을 해소함과 동시에 복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꾀해야 함
 - 노동의 질적 투입 측면에서는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 개혁과 관련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한편, 경제전반의 자본 투입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거주환경 개선, 투자 관련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리모델링 등 투자환경 개선과 동시에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 촉진 전략이 병행·추진되어야 함
 -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이 1등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R&D 투자의 쓸림현상을 방지하는 등 R&D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 등이 필요함

- 둘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총량 증대와 더불어 고용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함
 -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근원으로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질 좋은 고용 창출이 관건
 - 따라서, 창조경제 실현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음
 - 창조경제란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의 패러다임 전환. 즉 노동 투입이나 자본투입 같은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창의적 인적자본과 기술혁신에 기초한 '창조·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말함
 -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성장과 일자리창출의 동시 달성을 의미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으로 취업애로계층인 여성과 청년, 장년층의 고용률 제고
 - 일-가정 양립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비경활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견인
 - 일-학업 양립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고, 특히 '선취업-후진학'을 뒷받침하는 듀얼시스템 정착
 - 베이비붐세대의 점진적 은퇴를 돕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가교일자리 창출
 - 기타 장시간 근로 개선, 유연근무 확산, 고용-복지 연계 등을 꾸준히 추진
- 셋째, 의료 관광, 복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 확충과 더불어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금융 경쟁력 제고 및 산업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
 -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비스 수가 재검토 등을 통해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걸 맞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함

- 차세대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사회서비스를 육성
 - 1992~2012년 사회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약 8.1%로 동기간 전산업 1.3%, 제조업 -1.0%, 서비스업 전체 3.0%를 상회
 - 사회서비스 산업 관련 사회복지업과 의료 및 보건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각각 0.90, 0.83으로 제조업 0.56, 전산업 0.67보다 높은 수준
 - 국내도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선진국일수록 사회서비스의 경제 기여도가 높음

- 의료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
 - 외국인환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0년 35.9%, 2011년 49.5%에 달하면서 2011년 기준 총 외국인환자 수는 12만 명을 초과
 - 이에 외국인 환자 총 진료비가 2009년 547억 원에서 2011년 1,809억 원으로 급증, 2006~11년 건강 관련 여행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17.2% 증가
 - 2011년에는 그동안 적자행진을 지속하던 건강관련 여행서비스 수지가 5,22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생산유발효과가 2009년 1,190억 원에서 2011년 3,590억 원으로 늘어났고, 의료통역사 등 신규일자리 1,800개 창출

- IT제조업과 자동차산업 등 선도업종의 호황이 국내 부품업체나 하청업체의 호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제고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중견기업(히든 챔피언)의 육성을 통해 산업연관효과를 강화해야, 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국내 경기의 호황으로 연결 가능
 -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신소재분야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정비

-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새로운 금융규제개혁 도입에 따른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 전문 금융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금융허브 발전 전략을 재구성해야 함

-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금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기업과 가계에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
-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의 도입으로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을 장기화하고 급격한 유출을 방지해야 함
- 아울러, 반복되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강화된 글로벌 금융규제 도입이 필요하나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만큼 선별적 도입이 필수

○ 넷째, 부동산 시장 경기 회복 및 연착륙을 위한 노력 가속

-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대책들의 조속한 처리 시급
 - 취득세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로 시장 심리 회복 시급
- 임대차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 필요
 -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도 고려
 - 하우스푸어 등 임대인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확정일자에 대한 법적효력 강화
 - 전월세전환율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거래 가능한 임대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주거비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
- 대형주택의 초과공급 해소 방안 마련
 -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된 가격에 대형 미분양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 특히, 대형주택을 다수의 중소형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 비수도권의 대형 주택이 수도권에 전철을 났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중소형주택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재연 대응책 마련
 -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주택공급축소정책의 경우, 중소형 대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장 수급 환경 분석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
 -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검토

- 한국형 부동산 시장 환경 개선 방안 마련

- 부동산 수요와 공급 기반이 타 선진국과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중장기 인구 및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적인 중장기 부동산 시장 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섯째, 사회 각 부문의 신뢰 수준 및 통합력 제고, 부패 방지 강화, 국가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함

- 사회통합, 투명성, 신뢰, 정책의 예측성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함

-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완화와 통합력 제고를 위해,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 전망 보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지역별 거점대학의 육성과 지역특화 발전 등이 필요
- 신뢰, 투명성, 반부패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정부 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ISO-26000)을 참고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여섯째, 재정 건전성 기반 하 투자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복지 부담의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확보

-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재정적자누적→국가채무급증→이자부담 증가→재정적자확대’의 우려 고조

- 정부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988년 이후 26번 중 22번 재정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
- 국가채무가 1997~2012년에 年 14.2% 증가(60.3조→443.1조원)하여, 명목 GDP증가율 6.3%(506.3조→1,272.5조원)를 크게 상회
-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2004년 9.0조원에서 2012년 19.1조원으로 年9.9% 증가
- *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편이며, ‘적자누적-부채급증’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경우 재정위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음

- 경기 상황에 맞는 계획적 재정 편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 경제증가율이 2012년 2.0%, 2013년 2.6%에서 2014년에 3.8%로 회복될 전망 (정부전망치는 2014년 3.9%)
 - 정부는 2012년에 -17.4조원(명목GDP의 -1.4%), 2013년에 23.4조원(-1.8%)의 적자재정을 편성하였고, 2014년에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25.9조원 (-1.8%)에 달하는 적자재정 편성

- 투자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 기반 확충 시급
 - 소모성 지출 성격이 강한 보건복지분야 지출이 2007~2012년에 연평균 8.6% 증가하였고, 2013~2017년에도 6.4% 증가할 전망
 - 투자성 지출성격이 강한 SOC 지출은 동 기간 +4.7%에서 -6.4%로, 산업·중소기업 지출은 +3.7%에서 -5.7%로, R&D 지출은 +10.3%에서 +3.9%로 축소

-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통일 준비를 지속해야 함
 - 남북한의 갈등과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

 -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21세기 블루오션으로서의 북한 시장 개척', 평화비용 절감 등의 장기 효과도 발휘

 - 이산가족의 70% 가량이 77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 **HRI**

경제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 이부형(2072-6306, leebuh@hri.co.kr)
선임연구원 정민(2072-6220, chungm@hri.co.kr)